18. 정답 4)번

- 19. 현개까지 복기된 지문만으로는 🗇 🗭 2개가 정답이 된다
- ③ (O)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는, 단순히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 (X)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나 피의자로 자처하는 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증거를 수집 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할 것이므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하여 바로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77.2.8, 76도3685).
- (○) 주차단속공무원(여, 26세)이 불법주차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동 차주가 하반신마비 장애인임을 알고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동 장애 인이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치마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고 또한 휠체어로 밀어붙여 상해를 입 게 한 사안에 대하여 상해부분만 인정하고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은 무죄로 한 원심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 하 면서, "형법 제13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 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 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하다. **불법주** 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폭행 당시 주차단속 공 무원은 일련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였다(대판 99.9.21, 99도383/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

한 대 등 참 한

2006년 10월 1일 일반(남.여) 2차·101단(1차)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부산원(804-9112), 대구원(241-0112)

1.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효력이 발생한다.
- ② 기피란 제척원인을 제외하고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 려인정 되는 경우에 한한다.
- ③ 기피에 대한 재판은 법원합의부에서 결정한다.
- ④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은 법원사무관에게도 준용된다.

2. 진술거부권의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출석시켜 신문 할 때에는 신문 전 피의

자에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한다.

- ②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진술도 진술거부권의 대상에 포함된다
- ③ 판례에 의하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피의자로부터 받은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주취 운전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해도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3. 소송행위대리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로만 묶은 것은?

 □ 고소
 □ 고발
 □ 상소
 □ 재정신청

 □ 자수
 □ 변호인 선임
 ④ 자백

 $\bigcirc\bigcirc\bigcirc\bigcirc$

2 700

 \bigcirc

(4) (L)(D)(A)

4. 다음 설명중 틀린 설명은 ?

- ① 비친고죄(강간치사)로 공소 제기되었다가 친고죄(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경우 비로소 피해자의 부가 고소장을 제출한경우에는 강간죄의 공소제기기 절차는 법률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 ② 세무공무원 고발없이 조세범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 세무공 무원이 비로소 고발한 경우 추완이 인정 될 수 없다
- ③ 상소이유서제출기간 경과후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호인이 그 기간경과전에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적법.유효한 상소이유로 볼 수 있다
- ④ 간통죄의 고소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후 이혼심판청구서가 기 각된 때에는 다시 같은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 되었다고 하여 친고죄의 공소제기 요건에 생긴 흠결이 보정될 수 없다

5. 압불심검문(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으로 옳은 것은?

- ① 경찰관은 불심검문에 대하여 응답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 여는 인근의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 질문시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와 소속, 성명, 목적과 이유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 ©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하며, 변호 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필요는 없다.
- 당해인을 6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다.
- ◎ 증거자료 수집위해 불심검문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으면 임의수사도 할 수 없다.
- ②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검사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임의수사로서 허용될 수 있다.
- ③ 임의동행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는 변호인의 접견교통 권이 인정된다.
- ④ 피의자의 승낙을 받아 유치하는 것은 임의수사로서 허용되지 만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라는 제한을 받는다.

7.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영장주의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형사절차에서 강제처분을 함에는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한다는 주의이다.

- ② 형집행장은 영장이 아니다.
- ③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적용되므로 법원의 강제 처분에는 적용이 없다.
- ④ 강제수사법정주의는 영장주의가 전제가 되는 원칙이다.

8. 긴급체포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 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 속이 아니다.
- 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근거에 의하지 아니하면 영장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로에 해당
- ③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한다.
- ④ 위법한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니 그 체 포에 의한 유치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유죄의 증거라 할 수 없다.

9.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체포·구속시 사유만으로 판단한다.
- ② 석방 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한 때에는 재구속 허용한다.
- ③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의 등본 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체포·구속적부심사기간은 수사관계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0. 수사기관의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신체검사는 검증으로서의 성질이 없다.
- ② 법원의 검증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나 수사기관의 검증 조서는 검증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때 증 거능력이 인정된다.
- ③ 사법경찰 리가 작성한 실황조사서가 형소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수사기관의 수사보고서에 검증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도 그 기재부분을 증거로 할 수 없다.

11. 증거보전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검사는 판사허가 없이도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② 증거보전처분은 증거보전청구 당사자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 처분을 행한다.
- ③ 증거보전청구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청구할 수 있다.
- ④ 증거보전절차에서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피의자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

12. 다음 중 수사절차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의자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검사의 수사종결처분에는 공소제기·불기소처분·공소취소· 피의사건의 이송 등이 있다.
- ③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④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한 때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 하여야 한다

13. 재판상 준기소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준기소 절차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고등법원의 심판 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부하는 제도로서 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① 동의 대상은 반드시 증거능력없

- ② 현행법상 준기소절차의 대상에는 형법상 직권남용죄, 불법체 포, 감금죄, 폭행, 가혹행위죄와 공직선거법상의 매수 및 이해 유도죄 등이 있다.
- ③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이 이유있을 때에도 사건을 관할 지방법 원에 부하는 결정을 하고 재정신청이 이유없는 때에는 기각 결정을 한다.
- ④ 판례에 의하면 심판회부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 할수 있으나,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없다.

1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미리 참여신청을 한 경우 피고인 참여없이 실시한 증인신문은 설사 변호인이 참여하였어도 위법이다.
- ② 소송관계인의 참여 없이 법정외에서 시행한 증인신문 조서에 대하여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 그 자체를 시행하지 아니하였 다면 그 증인신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③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헌법상 재판절차 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 피해자 외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 ④ 법원이 다른 증인의 면전에서 증인을 신문하였다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다.

15.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에 관한 다음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
- ② 범행 직후 범행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관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영장없이 압수, 수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도없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 수색할 수 있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이 유류한 물건이나 수유, 소지,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사후영장을 받을 필요도 없다.

16. 다음 중 옳은 것끼리 고른 것은?

-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피의자와 대담하는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녹화내용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 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것이므로 피의자신문 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
- ©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송치일 당일에 작성되었다면 임 의성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라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없다.
- © 피의자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진술조서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피의자신무조서로 본다
- ② 검찰송치전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송치후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취급할 수 없다.
- 영찰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가 원진술자의 행방불명으로 공판기일에 소환할 수 없는 경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더라도 이를 채용한 것은 위법하다.
- 때전문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인정함에 동의하지 않아도 제310조의 2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bigcirc\bigcirc\bigcirc\bigcirc$

2 702

3 628

4 208

17. 당사자의 동의(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 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의 대상은 반드시 증거능력없는 증거에 한정되지 않는다.

- ②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 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 ③ 동의의 효력은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여도 소멸되지 않는다.
- ④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 은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8. 다음 증거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 ① 수사기관이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압수한 증거물
- ② 수사기관이 전화 등을 비밀녹음하여 압수한 증거물
- ③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고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 ④ 다른사람이 고문 당하는 것을 보고 한 자백

19.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몇 개인가?

- 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 © 가정불화로 유아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낙태를 시키려한 정황적 사실은 보강증거가 못된다.
- © 피고인이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는 때에 그 신분의 현존은 자백을 보강하는 간접증거가 된다
- ②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 그 범죄 일시경에 피고인의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남편에 대한 진술로서 기재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 © 히로뽕, 주사기, 자기앞수표 등에 대한 압수조서는 압수된 양을 넘는 부분의 히로뽕 소지 및 매매사실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① 5개

② 4개

③ 3개

④ 2개

20. 즉결심판절차가 아닌 것은?

- ① 다른 보강증거없이 피고인 자백만으로 유죄인정 할 수 있다.
- ② 청구할 수 있는 주형은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사건에 한한다.
- ③ 판사가 즉결심판청구기각하였을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지검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④ 모든 즉결심판사건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개정요건이다.

< 정 답 >

1	2	3	4	5	6	7	8	9	10
2	2	4	3	1	4	3	3	1	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4	2	4	3	2	2	1	1	4	4